

민주, ‘김건희 특검법’ 내달 14일 본회의서 표결 추진

‘명씨 통해 부정선거 의혹’ 추가
“한동훈, 자체 특검안 내야” 압박
“‘특별감찰관 추천’은 해법 아냐”
“국힘과 제3자 추천안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월 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마친 뒤, 14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표결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7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 때 본회의는 통상 매주 목요일에 열린 만큼 다음 달 14일과 21일, 28일 등으로 (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속해서) 열리는 게 맞다”며 “(김건희 특검은) 결국 (거부권 행사·재표결을 감안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본인이 결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편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여당의 ‘김건희 특검법안’을 요구하며 한 대표 압박에도 나섰다.

윤종균 원내 대변인은 “한 대표 개인 입장이든 국민의힘의 당론 의결이든 특검안을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민주당 안과 병합 심사해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계속 여당이 특검법안을 내주길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은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적당히 사과하고 활동을 자제하고 인적 쇄신을 하고 적당히 특별감찰

관을 임명해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을 두고는 협의할 수 있지만, 특별감찰관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강제조사 권한도 없는 특별감찰관 임명만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도 현안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추천 권한 등 내용을 두고 여당과 협의와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얘기다.

한민수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을 여당과 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 대표가 진한(진한동훈)계 의원들과 특검법을 발의하면 논의해 보겠다”면서 “채 해병 특검법은 제3자 추천안을 얘기만 하고 발의하지 않았는데,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면 20명 넘게 모였다던 친한계 의원들과 (법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서삼석, 농해수위 3선 관록 ‘농심’ 대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사진)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선 의원의 관록으로 ‘농심’을 대변하는 정책 질의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농·어업인 대상으로 5년 연속 여론조사를 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료집을 만들고, 현장의 민심을 담아 정책 질의와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농민의 요구대로 수확기 쌀 가격은 80kg 기준으로 23만원이 적정하다고 했다. 정부 보장 가격은 20만원이다.

‘지역농림어업협력법’ (협치모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어민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한 지자체가 없다고 꼬집었다.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음식의 수입산 실태를 지적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국내



산 농산물 활성화 답변을 받아냈다.

윤석열 정부의 어촌 소득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 어민·어촌·어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주문했다.

해수부의 플라스틱 어상자 조기 교체 약속,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농약의 시험성적서 전산화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등록, 돼지등급제 제도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계원, 하반기 교육부 특교 9억4500만원 확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사진)은 24일 올해 하반기 교육부 지역교육 현안 수요 특별교부금으로 9억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예산은 여수시 여도 초등학교와 화양 고등학교의 강당 시설보수, 바닥 보수, 옥상 방수 등 누수 보수 공사에 사용된다.

여수화양등학교 4억4600만원, 여도초등학교 4억9900만원이다.

개·보수 공사는 내년 초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진행된다.



조 의원은 “노후화된 학교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매년 전·후반기로 나눠 어려운 지역의 교육 현안 수요에 맞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 “당 대표, 원내·외 총괄”...특별감찰관 추천 추진

대통령실 “당 정체성 간과” 반박
국힘, 국감 후 의총서 논의키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며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서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당의 정체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한층 격해지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 대표는 법·제·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는 전날 자신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추경호 원내대표

가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맞선데 대한 반격으로 읽힌다.

그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 왔다”며 “이 정부가 출범하고 반한점을 도는 시점에서 저희가 아직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 건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지금까지 (여당의)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국민은 (여당이 특별감찰관 추천도) 안 하면서 무슨 변화와 쇄신을 말하느냐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헌법적 가치와 당의 정체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반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별감찰관은 분명 추진해야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 문제에 더는 관심이 없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후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가 오는 27일 마무리되는 만큼, 원내지도부는 늦어도 내주 초 의원총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후 8년째 공석이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강호동 농협회장 “연임 생각해본 적 없다”

국회 농해수위 국감서 답변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24일 “지난 국정감사 때에도 지적이 나왔는데 아직 연임에 대해 생각해보진 않았다.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 출석해 “농협협력위원회라는 내부조직을 통해 연임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셀프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은

안건을 회의 전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18일 국감에서 강 회장이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위증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17일 열린 이사회에선 농협법 동향 보고가 이뤄졌는데 기존에 발의된 농협법에 대한 내용을 이사회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했고 현황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강 회장은 “연임과 관련된 농협법 입법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의된 농협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앙회장 연임에 대한 내용도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연임을 위해 농

정협력위원회라는 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수당으로 19명의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100만원씩 1900만원, 지금까지 5700만원을 지급했다’고 비판하자, 강 회장은 “임의조직이 아니라 내부 규정에 따라 만든 공적인 조직이고 회의수당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최된 농협중앙회 제13차 정기이사회에서는 보고 사항 3건과 기타 보고 1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안건자료에는 △회장 연임 1회 허용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선욱 기자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